

경기시민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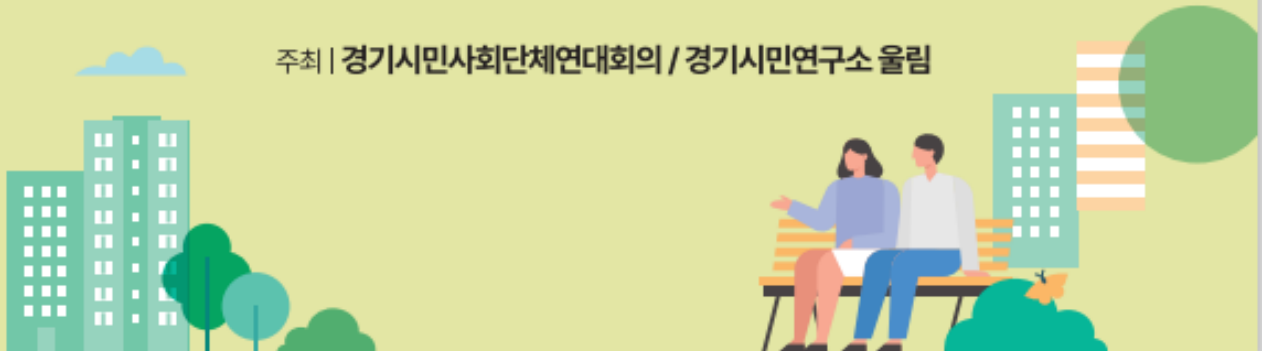


# 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2024년 **6월 25일**(화) 오후 2시~4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복합시설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연구소 올림





# 「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 1. 취지

- 7월 1일이면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한지 2년이 넘어가는 시기에 경기도정 운영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에서 전반적 평가가 요구됨.
- 이번 포럼을 통해 민선8기 경기도정의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경기도정에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2. 개요

- 1)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14:00
- 2)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시설관 2층 대회의실
- 3) 공동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 ◆ 프로그램

좌장 : 홍용덕 이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한신대  
외래교수)

### ▣ 주제발표

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 손혁재 전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 정치학 박사

### ▣ 지정토론

- 젠더(여성) :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돌봄(복지) :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
- 기후(환경) :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 도시(주택) :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 시민사회(협치/언론) : 정창욱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 도정전반 :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 회장

### ▣ 자유토론(참가자)



# 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손혁재

前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

정치학 박사

# 경기도의 위상과 가치

## ○경기도의 위상

- 최대지방정부
- 인구 1,409만명, 세대수 601만(2024년 4월 기준)
- 경제 총생산(GRDP) 1위(546조8천억원, 전국 2,165조7천억원, 2022년 기준), 2위 서울 485조7천억원, 3위 충남 128조5천억원
- 1인당 생산(GRDP) 6위(3,997만원, 전국 평균 4,195만원, 2022년 기준) 1위 울산 7,751만원, 최하위 대구 2,674만원
- 1인당 지역총소득 4위(4,364만원, 전국 평균 4,256만원, 2022년 기준) 1위 울산 6,097만원, 2위 서울 5,724만원, 3위 충남 4,802만원
- 고용률 9위(64.9%, 전국 평균 63.5%, 2024년 5월 기준) 1위 제주 70.0%, 최하위 부산 57.7%
- 불평등 상대적으로 낮음(전국 4번째로 낮은 불평등)
- 생태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3위 지난 10년간 증가율 2위

## ○경기도의 가치

- 서울의 변두리 아님, 경기도민의 삶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삶의 현장
- 한국 미래 끌어갈 글로컬(glocal) 정치단위
- 경기도 일은 경기도에서 스스로 해결

# 민선8기 경기도

## ○경기도 슬로건

- 변화의중심;대한민국의중심, 더나은미래를 위한변화의중심
- 기회의경기; “기회가넘치는경기도, 기득권깨는경기도, ‘경기찬스’로가득한새로운경기를만들고싶습니다.”  
〈김동연도지사6·1 지방선거당선소감〉

##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 - 혁신·기회·통합

## ○도정 3대비전

- 더많은기회;민간의혁신과성장 뒷받침하는도정‘
- 더고른기회;도민모두의삶의질 높이는도정
- 더나은기회;가치있는미래약속하는도정

##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
- 경기도정은중앙정치의 축소판이 아니라 경기도 실정과도민 요구바탕으로 생활정치

# 경기 민선8기 2년 평가

## ○매니페스토 평가; 최우수

- 2024년 SA등급(경기서울부산광주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 평가분야; 2023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 공약완료율 35.59%, 전체평균 27.44%, 2023년 12월 기준
- 계획대비 재정확보율 54.59%, 전국 최고
- 3년 연속 공약관련 최우수 평가
-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분야 최우수상
- 2023년 공약실천계획평가 SA등급

##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 전국 1위

## ○경기도는 당연하다는 반응

- 민생 위주의 실사구시,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
- 정책 위한 정책 아닌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일
- 여당과 야당의 진영 논리 벗어나 오직 민생



# 평가의 한계

## ○ 평가기준이 공약이라는 한계

-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이 모두 공약에 담겨 있는가
- 공약은 모두 지금 경기도에 꼭 필요한 것인가
- 정책방향이 경기도의 바람직한 내일을 담보하는가

## ○ 시대정신에 충실한가

- 시대정신;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 시대정신 반영한 공약도, 정책도 미흡
-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지역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 필요

## ○ '김동연 표 정책' '경기도 성과'로 꼽을 만한 실적 보이지 않음

## ○ 속도감 없는 정책 추진

# 민생경제 회복

##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 공공 활용 가능한 땅 이용 무주택자 등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 ○ ‘막차 걱정 없는 경기도’

- GTX 연장으로 ‘출퇴근 1시간의 여유’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 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
-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과 심야버스 대폭 확대

## ○ 활발한 외자유치

- 2024년 5월 기준 국내외 기업, 펀드 등 민간투자 69조 2천억원 유치
- 국내외 글로벌 기업 16조원 투자 유치
-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산업지구 조성 과 기업유치 18조 1천억원
- 첨단산업 분야 34조 4천억원 투자 유치

# 주요 성과 - 기회소득

## ○기회소득; 휴머니믹스(사람중심 경제)

- 가치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할 때 일정기간 소득보전
- 개인역량강화, 사회지속가능성확보, 도민 삶의 질과 만족도 상승
-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2024년추가
- 예술인기회소득; 개인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 2023년 7천명 지급
- 장애인기회소득; '정도가심한장애인' 월 5만원(하반기부터 월 10만원 인상 추진) 조건(1주 2회, 1시간 이상 활동) 사회적비용(의료비 돌봄비용) 감소를 가치창출로 인정, 2023년 7천명 지급, 2024년 1만명 확대
- 체육인기회소득; 현역선수, 선수출신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7천800명 연 150만원
- 농어민기회소득;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등 인증) 1만7천700명 월 15만원(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기후행동기회소득; 걷기, 자전거타기, 배달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활동 인증 도민 10만명 최대 연 6만원
- 지역화폐 지급,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도민 참여 활성화 기대
- 아동돌봄기회소득; 마을주민들이 부모 대신 아동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 월 20만원 지급

#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대응에 앞선 경기도

- 2024년 4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024년 4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40명)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도 예산제도 운영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기후대응기금 1천205억원
- 에너지 용자예산 25억원에서 267억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녹색화 위해 1,000억원 규모 신규사업
- 중소기업 기후역량 강화 위해 '경기 RE100 플랫폼(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구축 중, 2025년 6월 개통 예정
-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경로당, 어린이집,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2022년 73개소, 2023년 66개소, 2024년 63개소)

## ○기후위기대응에 다양한 계층·세대 참여 보장

- 지역 특성 반영한 의견 수렴과 탄소중립 실천 위해 31개 시군 320명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구성
- '도민 RE100' 프로그램; 도민들이 직접 태양광 설치 전기요금 절감
- 8천여 가구 태양광 설치 122억원 지원(2023년 2배 증액, 중앙정부는 예산 절반)
- 163개 에너지 자립 마을과 에너지 기회 소득 마을 지원

# 기후위기 대응

## ○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 선언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목표
- 중앙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
- 2024년 2월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의정부·동두천 시민 등 경기도민 500여명 출자
- 공공용지 44개소 13MW 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예정; 작은 공공용지 모아 RE100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
-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RE100 이행 실적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 계약 체결, 2023년 7월 SKE&S 등 8개 민간 투자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RE100 산업단지 투자 협약 체결
- 2023년 11월; 삼성전자가 산업단지 내 45MW 태양광 시설 생산 전기 20년간 구매 계약, 민관 협력으로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 계약
- 2024년 3월 기준 계약 이뤄지거나 예정된 민간 투자 규모 1,100억원 (73MW)
- 2024년 신규 태양광 발전량 전년 대비 18% 증가 (2022년 181MW 2023년 213MW)  
; 전국 태양광 신규 설비 8% 감소

# 기후위기 대응

## ○ 1회용품제로 공공 → 민간, 탄소흡수원 조성 등 친환경 생태계 조성

- 2022년 12월 '1회용 플라스틱제로' 선포
- 2023년 청사내 1회용기반입금지
- 31개시·군과 1회용 플라스틱제로 공동선언
- 2024년 1월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공공기관 1회용품 구입과 사용 전면 금지
- 2023년 9월 '스위치더 경기' 발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 에너지 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자원순환, 농축수산, 흡수원 등 도정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
- 2024년 3월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 출시;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 효율 개선/기후테크 개발 / 1회용품 대체재 생산·서비스 사업 등 분야 보증과 이자 감면
- 중앙정부의 1회용품 사용 금지 유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종이빨대와 다회용기 생산·서비스 기업 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
-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부천 대학캠퍼스, 안산 샘골로 먹자골목, 광명 무의공·광명4거리, 양평 세미원 등 4개 시군 5곳 3년간 30억원 투자 다회용기 대여·반납 시설 구축

# 외교

## ○ 활발한 국제 교류·협력; 해외투자유치에 방점

- 37개국과 경제교류, 투자, 지방정부 교류협력 강화
- ‘혁신동맹’; 첨단산업·기후·경제위기 등 세계적 공통과제 해결 위한 교류협력 확대
- 미국 미시간주와 친환경모빌리티·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 형성
- 미국 플로리다주 국제무역사절단 경기도 방문, 경제교류 확대, 바이오·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
-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우호협력관계 재개, 기후변화 대응·첨단산업·스타트업·인적 교류 분야 등 교류협력 추진 합의
- 미국 워싱턴과 애리조나주와 교류협력의 첫 물꼬
- 미국 샌디에이고시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와 경제협력협약
- 미국 UC 샌디에이고 대학 경기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참여 결정
- 중국과의 교류도 성과; 라오닝성과 경제, 산업, 문화, 체육,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심화협약, 경기도 방문한 라오닝 당서기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면담
- 2024년 1월 다보스포럼 참가

# 적극적 도정

## ○ 선감학원피해자 인권 적극 대응

- 선감학원; 안산 선감도에 부랑아단속 명분, 1980년대까지 운영, 수천명 강제수용, 강제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유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선감학원 운영주체(경기도 국가) 사과와 피해회복지원권고
- 폐쇄 40년 넘고, 중앙정부와 관선지사 잘못, 희생자 추정묘역 찾아가 “경기지사로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
- 경기도 거주 피해자 1인당 위로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씩
- 2024년 3월 국가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 발굴 사업’ 추진(총사업비 9억원 예비비로 긴급 예산 편성)

## ○ 지역화폐 발행지원

-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 ○ 활발한 투자유치

- 2024년 5월 기준 국내외 기업, 펀드 등 민간 투자 69조 2천억원 유치
- 국내외 글로벌 기업 16조 원 투자유치 -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산업지구 조성 과 기업유치 18조 1천억원
- 첨단산업 분야 34조 4천억원 투자유치



# 민선8기 협치 노력

## ○도정 협치

- 도의회여야동수;가부동수면부결->여소야대효과 - '여야정협의체'
- 공공기관기관장인사청문회대상기관전국최다
- 도의원초청간담회,도의회청년의원소통간담회
- 경기북부발전방향에대한논의위한경기북부도의원과의소통

## ○경기도정치를 위한 협치

- 여야구분없는국회의원초청간담회
- 서울부동산문제해결위해경기도와협의없이신도시추진에대한경기도시군과의협이미흡

## ○타시·도외의 협치

- 타시·도와협력강화,충남·전남과상생협력업무협약
- 수도권시도지사(경기서울인천) 만나수도권현안공동해결합의
- 중앙정부의법인세부자감세가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놓고타 시도와의연대와협력은미흡, 중앙정부에대한공동전선도미흡
- 한강상수원문제(경기도-서울-강원도) - 수도권협력;교통(광역교통망)

# 경기도정의 시대적 환경

## ○ “돌아갈 수 없다”

- 영국 싱크탱크 NESTA가 전망한 코로나19이후의 세상; 이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
- 이스라엘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 ○ 대전환의 시대

- 전환의 핵심;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인구구성의 변화(MZ) - 코로나19가 전환 앞당김

## ○ 4차 산업혁명; 4초(超)시대

- ‘초’고속으로 ‘초’연결해 생산된 ‘초’용량 데이터 분석·활용하는 ‘초’지성
- ABC(AI, Big Data, Cloud)에 사물인터넷(IoT)과 5G 결합
- 사람-사물, 사람-기계, 생산자-소비자, 산업-산업간 경계 뛰어넘음
- IT 중심의 디지털 환경에서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 대전환 시대의 키워드; 일자리 안전 공정

- 일자리와 안전; 보수든 진보든 지구적 차원의 시대정신 -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하는 시대정신은 일자리 창출
- 공정; 특권과 차별 해소할 공정한 시스템 구축 요구 - 생명 중시하는 안전

# 경기도 대내적 환경

## ○저출생 고령화

- 인구절벽; 출생률(0.78명, 2022년) OECD 국가중 최하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감소(71%에서 2030년 66%로)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0년 뒤매해 1%씩 감소, 100년 뒤인구 2천만명
- 65세 이상 고령인구; 2020년 815만명, 2024년 1,000만명, 2049년 1,901만명
- 고령인구 구성비 2020년 15.7%,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
- 경기도; 2022년 출생 7만4천명 사망 7만8천명, 자연감소 4천명에서 2052년 출생 6만2천명 사망 18만6천명 자연감소 12만4천명(30년 뒤 31배)

## ○저성장 양극화

- 경제성장 둔화, 제로성장, 2050년 0.5% 성장 전망
- 소득불평등은 완화되고 있으나 자산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음
- 근로소득 격차가 코로나 이후 확대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2019년부터 4년간 대기업 평균임금의 60% 수준

# 경기 민선8기의 정치적 환경

## ○정치적 환경

- 중앙정치와경기도정치의엇박자

## ○중앙정치;국민의힘 집권

- 보수로회귀, 중앙집권강화, 민관협치약화
- 경기도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한 곳: 이재명 443만표(50.9%) 윤석열 396만표(45.5%)

## ○경기도 지방정부

- 도지사; 2기 연속 더불어민주당(이재명-) 김동연
- 도의회; 여대야소에서 여야동수로 제7기; 일방적 여대야소, 민주당 128+7 자유한국당 1+3  
제8기; 여야동수, 민주당 71+7 국민의힘 70+8, 여소야대 효과  
현재; 민주당 77(70+7) 국민의힘 76(68+8) 개혁신당 2(2+0)
- 교육감; 첫 보수 교육감

## ○정당지지도(광역비례 기준) 국민의힘 약진

- 국민의힘; 제7기 자유한국당 25.5% 바미당 7.8% -> 제8기 50.12%
- 민주당; 제7기 52.8% -> 제8기 45.42%
- 정의당 몰락; 제7기 11.4% -> 제8기 3.60% (진보당 0.38%)      - 완충지대(제3지대) 부재

# 경기도정의 중앙정치 환경

## ○제22대 국회

- 여소야대연장
- 국민의힘 108석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1석(우원식 국회의장)

## ○경기도 중앙정치(60석)

- 더불어민주당 압도적 지배
- 민주당 53석 국민의힘 6석 개혁신당 1석

## ○외부조건; 중앙집중의 불균형 발전 전략

- 일원적 국가; 중앙정부가 지방을 행정기능에 따라 분할적으로 통제
- 부처별로 지방에 독자적 집행기구 설치, 지방행정 통제, 업무관장
- 제한된 자치분권 -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 지지부진
- 지방정치 왜소화/왜곡; 중앙정치 의존
- 이익유도정치; 지방은 유력정치인 대상으로 중앙로비
- 자원배분의 왜곡/지역불균형성장의 기반 제공

## ○경기도정치 부재; 경기도(민)보다 소속정당과 당론 앞섬

# 경기도정 발전의 과제

- 중앙정부 사업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 위상 탈피
  - 경기도 필요사업 독자적으로 정책 개발
  - 경기도민 복지 증진 시킬 서비스 효과적 공급 능력 필요
  -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 서비스 공급
  - 지방정치와 행정의 민주화로 경기도민의 공공 복지 실현
- 중앙정부와 경기도 역할 구분
  - 중앙정부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최저 기준/수혜 조건 결정, 경기도 공급
  - 중앙정부는 경기도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간섭 자제
  - 경기도 재정 자립도 높으려는 노력
  - 지방행. 재정 기준은 대통령령, 구체적 사안은 경기도의회 조례로 결정
  - 위임형 자치에서 참가형 분권으로
- 지역주권(지방주권)의 등장
  - 중앙집권적(엘리트 중심/획일/국가 중심) 권력 구조; 지식정보 사회 부적합
  - 부분공동체 중심의 자율적 활동 통한 창의성과 다양성 요구
  - 다극적 권력주체간의 공존과 협력 중요
  - 미래예측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증대하는 위험사회는 위험 분산 요구

# 자치분권 인식의 변화

## ○ 새로운 환경

- 모든 지역의 잠재력 극대화해야 지속적 국가 발전 가능 -)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
- 지역(국가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신축적)이 핵심 경제단위로 부상

## ○ 권력분점의 필요성

- 경기도 경쟁력 강화 위해 경기도문제 경기도가 결정
- 경기도가 경기도 지역 특성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삶의 질 높여야
- 보다 좋은 정책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실현

## ○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질서; 토플러

- 분권은 거북이 걸음, 중앙집권은 토끼뛰질

## ○ 지역문제는 국가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화 요구

- 행정권 중심의 분권 넘어서 사법권/입법권 포함
- 지역간 경쟁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확대

# 중앙정부와 경기도 관계

## ○도지사

- 정치적행정가 - 집행기관인 동시에 정치인
- 중앙정치권의 주요 구성원; 유력한 대선 후보
- 경기도 집행기관으로 중앙정부 관련 기관과 다양한 관계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정치의 최고 정책 결정자
- 중앙당의 협조 요청/정치적 고려에 대해 관심

## ○대리인 모형(agent model)

- 중앙정부 대리인 역할 -> 경기도에 대한 중앙의 통제 강조
- 중앙정부; 경기도 하위 기관 간 주 업무 추진/재원이전/인사운용 통제
- 경기도; 중앙 감독 아래 국가 정책 집행 -> 중앙 의존 강화
- 경기도의 자율성과 재량권 간과
- 지방재정력에 의해 경기도 자율성 결정 주장과 일맥상통

## ○대리인 모형의 특징

- 의회/정당보다 정치적 영향력 없는 중앙부처 관료가 중요 결정
- 중앙부처; 지방정부 관련 조직 통해 하부까지 순차적 위임 집행
- 지방정부는 상급정부의 명령/지시/위임에 순종; 3할 자치
- 중앙정부의 기술적 절차적 재정적 지원 없이 지방정부 운영 못함



#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관계

- 경쟁모형 (competitive model)
  -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더 많은 권한 확보 경쟁
- 동반자 모형 (partnership model)
  - 경기도; 국가위임사무수행 + 고유권능
  - 중앙과 경기도; 갈등, 상호협력적, 국정파트너로 동등한 권한과 의무
  - 중앙정부의 통제/강제 → 수용여부는 경기도가 결정
  - 현실; 양자간 권력/자원 측면에서 불평등한 파트너십 발생 가능성
  - 도지사과 국회의원의 적극적 중앙정부 접촉 강조
  - 정당/압력단체/시민단체 - 지방 정치행위자들 상호 경쟁
  - 지역개발/환경정책/복지정책에서 활발한 대정부 활동
- 상호의존모형 (inter-dependence model, exchange model)
  - 중앙-지방 상호의존; 법적 권한/재정적 자원/정보와 전문성/준립 정당성
  - 권한과 책임 공유, 서로 영향 주고받는 교환관계      - 통제 일시적 진행, 설득과 상의, 견제와 거절
- 경기도와 중앙정부 갈등
  - 경기도지사; 유력한 대선후보      - 김포 등 서울 편입 놓고 국민의힘과 김동연 지사 갈등



## <토론문> 성평등 정책 이행은 경기도 정책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23년 6월 20일(현지 시각)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3년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105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여섯 단계 하락한 결과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피지, 미얀마 등과 함께 정치권력 분배 영역에서 가장 후퇴한 국가로’ 지적됐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아무런 근거나 대안도 없이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 정치’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예견된 결과이다<sup>1)</sup>.

2024년 현재 주무 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초유의 멍청함과 무책임에서 보듯이 지표는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건 분명하며 ‘여성’을 지우겠다는 어리석음이 나아지길 기대하는 것 또한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 틈바구니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김동연)와의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협약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선 8기 최종 이행계획 295개 공약 가운데 여성정책 분야는 33개로 전체 공약 대비 11% 수준이며 성주류화 및 여성 경제활동 중심 주요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은 8개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민선 7기와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 반영비율이나 전국적인 성평등 정책 퇴행 국면에서 ‘그나마 나은’ 결과로 받아들여야 했다. 무엇보다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즉 기존 정책용어에 포함되었던 기표 또는 명칭 등이 무차별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성과로 평가했다.

그 예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유지, 경기도가 31개 시/군 성평등 정책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젠더 전문관’ 배치를 통해 ‘젠더정책 협력 기반 강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젠더폭력 공동 대응체계 구축’,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목표인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기존 일가정지원과를 ‘고용평등과’로 부서명 개칭한 것이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에 경기도가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약속했던 내용 일부와 만날 수 있게 된 점이다. 또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강화해 나감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써 관련 조례는 15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민선 8기 들어 제정된 조례는「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2022-07-19)와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07-19)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23-03-06)로 전부개정,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1) 「지역성평등정책퇴행, 기록하고 방향키 잡기」-민선8기1년 광역자치단체성평등정책평가토론회 발제서문.한국여성단체연합.2023.07.19.

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2022-12-30)로 일부 개정되어 일정부분 진전된 근거 조항 등이 마련되고 있다.

타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정책 연구 및 발굴 주체인 연구원 또는 재단 등을 효율이란 명분으로 통폐합 해버린 사례와 달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꾸준한 젠더 이슈 드러내기와 이론적 토대를 연구물로 확대 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은 ‘뚜렷한 변화 없음’이 ‘지속 가능한 변화의 조짐’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타 광역 시도와 대비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여타의 광역시도, 지자체 등과 다르게 취약하나마 기존 유지되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어놓거나 기존 정책사업을 무산시키는 등의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누가 지방 권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정책적 접근이 달리 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방향은 그나마 숨통을 틔게 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여성단체연합이 ‘경기도 성평등추진체계 안녕한가요’를 주제로 민선 8기 경기도 성평등 정책 일반을 모니터링한 바 있다. 우려한 대로 조사된 경기도 내 15개 지자체 등에서 추진체계 및 해당 사업 등에서 ‘여성’이 삭제된 자리에 ‘인구/출산/아동 돌봄/가족 행복’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여성’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좌표 화했다. 정부 부처 폐지 운운과 전 지구적으로 유례없다는 저 출생 국면이 맞물리며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러한 후진적 작태는 가부장적 사회가 지배적이던 70년대로의 회귀 다름 아니다. 이렇다 보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다시 사적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음이 정책 추진체계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것이다. 즉 사적 영역으로 여겼던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 사회적 의제 해결 영역으로 드러내어 꾸준히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사회문화의 동력으로 작동해 왔음을 다시 개인의 몫으로 돌리거나 그리되길 시도하거나 라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는 여성가족국 내 5개 과와 1개 센터, 1개 여성가족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선 7기와 8기 구조 변화로는 ‘여성의 일자리란 ‘가정/가족’을 축으로 유지되거나 위치됨을 행정 부서명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던 ‘일가정지원과’가 ‘고용평등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더해 기존 가족사업팀이 ‘1인 가구 지원팀’으로 개칭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가구 구성의 다양성과 변화를 일부 반영하였다는 점에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었다. 2024년에 이르러 과 변동은 없으나 전년 대비 1개 팀이 보강되는데 아동돌봄과로, 6개 팀으로 늘어났다.

2024년 현재 여성가족국 예산은 전년 대비 7.7% 늘어난 약5조3572억6700만원으로, 도예산 약33조7669억8600만원 대비 12.62%에 해당하는 적잖은 예산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과 예산은 2024년 현재 약350억 6700만원으로 0.7%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경기도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주요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도 세계여성대회’ 개최 지원 2억9000만원이 여성 사회활동 지원의 명목으로 새로 반영되었으며 ‘여성 폭력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예산이 전년 16억3114만원에서 약35억원으로 11.5% 늘었다. 스토킹 피해지원 예산이 약 4억원 새로 반영되었으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 비

용이 약 5억원 반영되었다. 여기에 더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의 상향 등 경기도 주요 성평등 정책 및 예산 변화는 민선 8기 도정 운영에서 크게 변화 없으나 강조하건대, 현재 부처 장관을 공식으로 두는 전무후무한 정부 부처 상황에 비해 이 ‘변화 없음’이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는 성평등 정책사업의 도내 확산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정이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성평등 정책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군 간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과 시/군 젠더 전문관 배치 현황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추진 중인 ‘젠더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또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설정한 목표를 수정 없이 진행해 나가 지역 여성단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 및 지원그룹과의 협업이 전제되는 추진체계 구축으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돌봄 노동의 정책적 고려’는 장애인·아동·노인 인구에 대한 장기적 돌봄 등이 성평등 정책 이행 측면에서 접근하여 성과를 기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책적인 비전이 성인지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 분명하다. 즉 사회 전체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과 현재 시점에 키워드 ‘여성’이 정책적 용어로써 위치되도록 하는 것이 구조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전략과 도민 일상의 안전의 문제와 정교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현재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저출생 대책’사업과 맞물리며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일례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sup>2)</sup> 2023 분야별 정책과제에 따른 경기도 시행계획 현황<sup>3)</sup> 가운데 ‘일-양육 병행가능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이 경기도 분청 포함 31개 시군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확립, 성평등한 일터 조성,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 강화, 여성 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등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은 정치적·퇴행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행계획이라는 점에서 민선8기 전방위적인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 이때 모·부성권 강화 측면에서 운영되는 육아휴직 제도 등의 사용은 여전히 공공영역과 대기업 위주로 전개되고 있으며 사업의 편재 또한 이 두 카테고리에서 운용되고 있음이 목표 실현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도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근간

2)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39-1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분야별 정책과제 및 하위 영역별 핵심과제, 추진과제를 세 단계에 걸쳐 분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17개 광역 시도 전부 4개의 대분야만을 구분하고 있음.

이 될 수 있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현재 아이를 낳은 수만큼 현물지원을 하고야 말겠다는 헛발질은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거부되어야 한다.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권 보장, 성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지역 상생 기반 구축 등등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이 민선 8기에 비로소 완결성을 갖게 되는 시간과 만나게 되기를, 여성의 권리를 교란하고 부당하게 비난하고, 그다음 사회적 담론을 비틀어 프레임에 가두고 갈라치고 마침내 포용적인 사회는 꿈도 꿀 수 없도록 하는 이 기이한 상황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 공동체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구호가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정부의 민선 8기 역할을 요청한다.

\*\* 본 내용에는 지난 2023경기성평등추진체계 안녕한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모니터링 결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힘

# <토론문> 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

## □ 경기도 돌봄(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

### 1. 현정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

-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와 민간 경쟁구도를 촉진하는데, 이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 민간주도 사회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사회적 약자 소외, 서비스의 사각지대 확대 우려와 함께 소득에 따라 서비스 질 격차가 발생, 새로운 사회서비스 양극화 발생이 우려됨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쇄 및 타 시도들의 사회서비스원 재단 통합 추진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3.27.시행).
- 최근, 정부에서 개시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전 국민 누구나 소득수준에 무관히 누구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 360° 돌봄과 유사
  - \*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서비스),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대상

### 2. 경기도 민선8기 대표 복지사업인 360°돌봄 추진

- 초고령사회, 1인가구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돌봄이 가장 큰 화두로 등장
- 우리 모두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정 순간 돌봄의 대상은 한정적일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누구나 태어나 부모의 돌봄을 시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중간 중간에 어딘가 편치 않을 때마다 돌봄을 받아야 함
- 따라서, 360° 돌봄은
  - 모든 사람이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돌봄은 시혜나 베품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추진

【 道 360° 돌봄 】

- 360° 돌봄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돌봄정책
  - ▶ **누구나돌봄** : 연령소득과 무관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15개 시군 12,000명)
    -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 등 7대 서비스 제공
  - ▶ **언제나돌봄** :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12세 이하 아동 23,583명)
    - 언제나돌봄 :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운영,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지원 등
    - 함께 돌봄 :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 안심 돌봄 : 초등1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 ▶ **어디나돌봄** :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돌봄을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 휴일야간 프로그램(돌봄형, 프로그램형, 자조형) 운영(42개 기관, 5만명)
    - 최종증발달장애인 전문인력(350명) 양성 및 맞춤돌봄 지원(최종증발달장애인 60명)
    - 최종증발달장애인 가족생활수당(월40만원) 지원(최종증발달장애인 210명)

360° 돌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돌봄정책		
구분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구분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 “누구나 돌봄” 체계 구축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돌봄시설·집에서도 야간·주말에도 어디서나 장애인 돌봄
대상	15개 시군(1단계) 도민 누구나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 (31개 시군) ※ 사업별 참여 시군 차등	장애인·돌봄인력·발달장애인가족 (31개 시군) ※ 사업별 참여 시군 차등	
돌봄	○ 기본형(5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특화형(2개): 재활돌봄, 심리상담  ○ 年 최대 150만원(1인당) 지원	○ 언제나 돌봄(5개):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시설형·가정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 함께 돌봄(3개): 가족 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안심 돌봄(2개):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 기관(19개 시군 42개소) 선정·지원  ○ 최종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대상자 (60여명)에 맞춤돌봄 지원  ○ 최종증 발달장애인 가구에 가족생활수당 (月 40만원 예정) 지원	
예산	166억 원 (도비 90, 시·군비 76)	230억 원 (도비 122, 시·군비 108)	42억 원 (도비 100%)	



### 3. 360°돌봄 추진 방향과 성과(과정)

- 민선8기 시즌1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360° 돌봄 정책 마련하였음
  - 최근, 정부에서 개시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전 국민 누구나 소득수준에 무관히 누구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 360° 돌봄과 유사**
    - \*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서비스),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
      -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대상
  
- 민선8기 시즌2를 맞이하여, **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사회보장 신설협의 진행, 대상자 상시모집, 민·관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고 해결하고자 노력중
  
- 경기도는
  - i) 360°돌봄이라는 **전방위적 돌봄정책**을 통해 우리사회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
  - ii) **선제적·창의적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모범의 사례** 구축하겠음
  - iii) AI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기술기반의 **24시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 도 AI돌봄 복지사업 】

- AI 노인말벗서비스(도비 311백만원/65세이상 노인 5,000명)
  - AI기술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확인대화로 노인의 위기상황 사전 예방,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
  
- **늘편한 시케어** (비예산/65세이상 노인 1,000명)
  - NHN 및 도 재가노인협회 협업으로 안부확인, 응급호출, 건강관리 및 인지기능 검사 등서비스를 앱으로 제공
  
- AI **어르신 든든키미 시범사업**(도비 50백만원/가정 내 학대피해노인 중 재학대고위험군 100명)
  - AI 음성인식 긴급호출 시스템 구축 및 심리 고위험군 선별, 전문심리상담 연계 지원(도 노인종합상담센터)
  
-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지원**(도비 200백만원/도 최종증발달장애인 생활센터 3개소)
  - 최종증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AI 실시간 감지 및 알림제공, 사고 예방 및 행동전문가 연계
  
-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도비 650백만원/4개 사군 1,300명)
  - 시콜과 마이데이터(전력, 통신, 상수도 등)를 활용하여 고독사 발생가능성 예측 및 즉시 대응

## □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2년 평가 발제문에 대해

-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만한 실적 보이지 않음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돌봄과 관련해서 얘기해보자면, 그래도 신선한 새로운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공 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음
    - : 아동돌봄 기회소득 - 마을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 월 20만원 지급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번째 시도)
  
  - 인구 1,409만명인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지방분권에 대한 충분한 고민 필요.
    - 현 정부 하에 지방자치 축소, 국가 중앙집중 강화되는 중
    -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함.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긍정적
  
    - 중앙정부가 못하는 지방분권을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하고 지원해야 함.
      - :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만 하는 것은 아님.
      - : 지방정부가 기초정부에 권한과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양하는 것도 고려
  
    -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남. 동시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 중앙정부사업과 경기도 사업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 중.
      - : 너무 많은 돌봄 및 사회서비스 사업과 세부 서비스들,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다른 지원은 시군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임.
  
  - \*예: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정부), 지역사회통합돌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개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
  
  - : 국가가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발생. 오히려 상향식(bottom-up) 전략을 통해 전달체계 개혁과 함께 제대로 된 지역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가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업들을 결합한 최종모형을 완성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
- 
- 살기좋은 경기도는, 살기좋은 경기도 시군들이 존재해야 가능.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경기도 내 시군 시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가능함.

- : 경기도는 개별적인 도민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들이 통합적이고 유연한 돌봄사업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
- :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에서 경기도차원의 소득지원 사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함.

\*360도 누구냐?(대상사선펙기준존재), 어디냐? 언제나? 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유연하고 통합적 서비스는 작은 단위로 내려갈수록 성공가능성이 높음. 가족을 대신해야함

- Care-Pass for Public은 모두를 위한 '돌봄패스'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누구라도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이 처한 상태나 욕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야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됨.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2.12.19. 프레시안>

: 통합돌봄의 핵심은 전달체계 개혁임. 서비스인프라 확충이든 돌봄과 보건의료의 연계시스템이든, 케어안심 지원주택이든 지역주도형 돌봄이든 모두 그 바탕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즉,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목적이 되어야 함.

: 따라서, 경기도에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같은 통합돌봄지원센터 전달체계 구축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조례 및 예산지원을 통해 시군에 이러한 전달체계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 경기도는 가장 효율적인 전달체계 모형 연구를 통해 시군에서 추진되는 성과들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운영모델을 찾아낼 수 있고, 통합돌봄의 효율성을 찾아가면서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문적인 지원을 해야함

-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내 시군들의 복지서비스에서의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즉, 경기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복지수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들을 추진해야 함. 단순하게 시군의 재정자주도 수준에서 차별하는 것만이나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지역단위에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수준이 같도록 지원해야 함.
-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 집행기관의 위상을 탈피하여 경기도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길 제안하셨는데, 그보다는 시군이 돌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중간 전달체계를 체계화하는 데 역할을 해주길 요구.

: 마을단위 통합돌봄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조례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경우, 이웃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에서 이웃들을 매칭연결해주는 신뢰할 만한 공공의 중간조직이 있어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시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선회 필요함.

○ 경기도의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360도 통합돌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은 긍정적임.

: 기존 돌봄서비스는 대상의 소득, 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누구나 돌봄은 돌봄서비스의 필요도·시급도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적격판단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기존 서비스와 대상자 선정 방식에 차이가 있음

-> 그럼에도 여전한 대상자 기준에 맞는 선정과정 거쳐야 함.

: 누구나 돌봄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서비스 제공을 계획,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대상을 폭넓게 확장

: 누구나 돌봄은 5대 기본형서비스와 7대 확대형서비스로 구분하여 시·군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

- 경기도의 7대 서비스 중 심리상담서비스는 기존의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하지만 이용 문턱이 높았던 기존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는 중요한 서비스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7월1일부터 대대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함.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 실제 한국에서 정부 주도의 통합 돌봄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돌봄 체계 구축 의지는 더 강고해짐을 짐작 가능한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함. 경기도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사업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있다. 2026년 3월에 맞추어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참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토론문> 경기 RE100, 답은 현장에 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후·환경분야 공약은 3대 비전 중 ‘더 나은 기회’, 9대 분야 중 ‘8.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295개 실천과제 중 247 탄소중립 펀드조성을 통한 녹색유망기업 발굴·육성, 248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등 24개 (247~270번)임. 홈페이지 공약·매니페스토를 통한 자체평가(2023.12.31. 기준)를 통해 모두 ‘정상추진 22개’, ‘이행 후 계속추진 2개’라고 밝히고 있다.

○ 경기도는 현재진행형으로 행정구역 외 지역에서 인구, 산업, 경제, 교통 등 모든 사회 외적 구성요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문제와 도시문제, 생존문제 등이 집약된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면서도 서울특별시와 달리 도내에 31개 기초지자체가 공존하기 때문에 도정을 실행하는 권한과 범위가 매우 복잡하다. 이런 까닭에 공간구조, 지향성, 의지, 정치사회적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는 기후·환경 부문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회와 위기가 첨예하며 엄중하게 공존한다.

○ 위와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반기 2년에 대한 평가를 기후·환경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행정체계와 제도, 거버넌스 영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가 멸절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민선 8기 김동연호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해결 의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한 것은 정부정책과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방향설정이라고 판단된다.

- 특히, ‘기후도지사’를 자임하며 2023년 4월 ‘경기 RE100’비전 선언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후퇴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목표 수립, 2023년 9월 ‘Switch The 경기’계획 발표를 통해 에너지전환 분야를 넘어 교통, 건축, 자원순환, 흡수원 등으로 확장된 종합대책 마련과 이를 체계화한‘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상당히 진일보한 계획을 수립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 기후대응기금 조성 과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및 RE100 공급계약 체결 등 전국적으로 태양광 신규설비가 감소하는 조건에서도 신규 태양광 발

전량 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과 에너지기회소득 마을 지원사업과 공공기관 태양광 시설설치 및 RE100 이행실적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전반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인 한계, 현장에서 태양광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인 보급 방안 마련,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을 얻는 것까지 상당한 사전 정지작업과 인적, 물적자원의 준비가 필요하나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여러 비전발표를 통해 약속한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도민의 참여와 역량, 재원을 모아 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 2. 행정체계

- 지난 2022년 10월, 환경국을 기후위기 대응력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기후환경 의제의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시점에서 좀 더 광범위 도정의 주류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기후환경단체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야 그 효과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경기도는 어느 광역지자체보다 앞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 온실가스감축인자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초기 운영 이후 확대 개편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개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자 예산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의 본래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다수의 입장이다. 제도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영역에서 기후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즉,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로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3. 거버넌스

- 기후환경분야 거버넌스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으로 대표적으로 경기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 경기도자원순환위원회 등 14개 민관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도민실천단 320명과 경기 기후도민회의 등이 운영되어 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일정한 거버넌스가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외 수자원본부 소관으로 경기도물관리위원회, 생태하천복원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공약중심의 거버넌스만 작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거버넌스 조직에서 서면심의와 의견수렴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4. 종합평가

-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인 신규택지개발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등 사업의 주체는 국가 또는 기초지자체이지만 도민은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기후도지사의 지향이 혼돈스럽지 않도록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신규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탄소흡수원이 사라지고 논과 밭, 습지가 등 생물다양성의 보고가 훼손되고 있으며, 반도체클러스터는 또다른 화석연료 기반인 핵과 LNG 발전소가 세워질 예정이며 시군간 도농간 지역간 격차를 불러일으켜 갈등요소가 증대되고 있다. 어쩌면 경기도에서 최악의 물분쟁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기에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의 의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비판받는 조직 개편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이 양립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언급한 것처럼 현재도 매우 빠른 속도로 모든 영역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인적, 물적, 기술적 축적은 매우 더디기 때문이다. 공약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면 과감히 그 이행시기를 조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다양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하고 도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효과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미 IPCC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구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검증된 방안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기에 인적, 물적, 재정자원을 집중적으로 모아내야 임기 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 〈토론문〉 민선 8기 경기도 도시주택분야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시·주택분야 공약은 3대 비전, 5대 분야, 39개 실천과제에 해당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상추진 20개’, ‘이행 후 계속추진 11개’, ‘완료 8개’라고 밝히고 있다.
- 경기도는 계속되는 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교통, 부동산, 환경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끊임없이 진행되는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 전월세 문제, 교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각종 문제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반기 2년에 즈음하여 공약이행과 더불어 지난 2년의 도시주택 행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 1. 공약이행

#### ▶ 분야 1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 총 4개 실국 7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지원, 제2·3 판교 테크노밸리조성, 주차장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및 지자체 개발사업 지원 등이다.

#### ▶ 분야 2 주택, 교통, 일자리가 유쾌한 경기

- 총 3개 실국 6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무주택자 주택공급, 부동산 세제 개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법 제정, 3기 신도시 건설,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다.

#### ▶ 분야 3 문화예술, 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

- 총 3개 실국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대부분 해당 시군 지역특화사업 지원이다.

#### ▶ 분야 6 북부에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

- 총 2개 실국 2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기북부 인프라 투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정비 등이

다.

▶ 분야 7 소통·협치로 만드는 자치 경기

- 총 2개 실국 2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다문화국 제거리 조성이다.

○ 의견

① 그동안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가 보인다.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북부지역 개발지원(4건), 3기 신도시(북부 3 지역), 관광지 조성지원(2건), 경기북부 인프라 투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접경지역 규제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남이 보인다.

- 그동안의 경기도 주택정책은 공동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는가가 핵심이었다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마련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보인다.

③ 개발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경기도가 보인다.

- 산업단지 관련 사업(산업입지과 2건), 각종 첨단산업 조성 지원(공간전략과 5건), 각종 관광지 개발사업(관광산업과 4건), 공원조성(정원산업과 2건), 시민공간 조성지원(균형발전담당관 1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 2. 2023년 주요성과

- 각종 기업유치, 산업단지 및 공공택지 지구 조성, K-컬처밸리 등 기반 조성 등의 개발사업과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사업이 2023년 경기도 주요성과로 나타났다.
- 더불어 전세피해 지원사업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정비를 위한 안전진단기준 완화와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주요성과임을 밝혔다.

## 3.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 AI 및 전기차 등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지속적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재생과 관련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전세피해 및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 및 집한건물 관리제도 개선 등이 눈에 띈다.

#### 4. 종합평가

##### ○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다

- 과거 경기도지사의 도정 비전에는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GTX 유치’ 등의 개발정책이 많았으나 민선8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개발을 전제로 한 메타 프로젝트가 적다.
- 오히려 민선8기 경기도의 정책추진방향에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음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 향후 경기도 도시주택정책이 무주택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 ○ 적절한 인구관리가 필요하다.

- 노후 신도시 재정비는 1기 신도시가 주를 이루며 해당지역은 성남 고양 군포 부천 안양시이다.
-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은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시에 해당된다.
- 경기도가 추진계획하는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신규택지 등으로 해당 지역은 의왕 과천(지구지정), 고양 수원(지구계획 수립), 평택 구리 오산 용인(신규택지)이다.
- 경기도 31개 시군중 특례시로 지정된 곳은 고양 수원 용인시 등 3곳이며, 특례시가 아닌 50만 이상 대도시는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시가 이에 해당된다.
- 적절한 인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10년내에 또다른 특례시가 지정될 수도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특별한 권한이 이양되지는 않는다. 현행 특례시 지정에 따른 이양된 업무는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③일정 면적(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④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및 ⑤공유수면 관리, ⑥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⑦「비영리단체법」상의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 7개이다.

- 그러나, 특례시의 권한은 갈수록 확대 강화될 것이며, 미래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립되고, 특례시가 7, 8개로 늘어난다면, 경기도의 행정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지방세제 개편 논의의 시작이 필요하다.

- 경기도와 같은 광역도의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례시 지역의 소방시설분 제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득등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경기도는 향후 개발가능 지역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부족한 지방세수를 때우기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 수도권 외의 지역을 포함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논의의 시작이 필요하다.

공약 번호	공약	담당 부서	추진현황	도예산 (억원)	정책목표	공약달성 확인지표	
<b>I. 더 많은 기회 :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정</b>							
<b>분야 1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b>							
13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정상	1,202.6	서민경제 활성화 * 예산 : 시군비 1,202.6억원	민생경제친화도시 연구용역 완료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 82중 0건 * 24년부터 도시포성 진행 예정
14	민생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정상	68.6	소상공인 인성적 자생력 기반 마련	소상공인 교육관 설치 : '25년 예정 혁신형카페팀 지원 : 24개소 중 11개 지원 상인동아리 지원 : 60개소 중 20개소 지원
30	제2·3판교 테크노밸리 ICT산업 메카 조성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정상	0	판교특화화 반도체 등을 연계한 ICT 글로벌 메카 조성 * 예산 : LH 60% GH 40%	지족용지 활성화전략 수립 완료 제2판교 테크노밸리 준공 완료 제3판교 테크노밸리 준공 : '25년 예정
37	주차난 심각지역 도로·유유지 주차공간으로 활용	교통국	택시교통과	이행후 계속추진	219	주차장 조성 및 무로기방 주차장 9,000면 지원(이행 율 57%) * 예산 : 국비 1,299,58억원 시군비 2,405,19억원	주차장 조성 지원 및 무로기방주차장 지원 : 9,000면 중 5,154면 확보 지원
38	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추진 지원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이행후 계속추진	0.4	반환공여지 등 국지원 확대 및 민간투자 환경 조성 을 위한 법률개정	법률제도 개선 건의 : 5건 완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 령」 개정('23. 3. 7.)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8회 중 3회 완료
39	자연보전권역 산업(공장)용지 면적제한 규제완화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정상	비예산	개발입지 공장의 집산화 유도·계획적 관리를 위해 조 상허용면적 상향조정	연구고제 추진 완료 정부 및 국회 건의 : 8회 중 6회 완료 토론회·간담회 개최 : 8회 중 5회 완료 규제관련 홍보 : 8회 중 4회 완료
41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의정부시)	경제투자실	산업입지과	이행후 계속추진	비예산	부족한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경기 동북부지역 균형발전	관계기관 건의 및 협의 : 4건 중 2건 완료 *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신단지획 관계기관 행정지원 : 2건 중 1건 완료
42	국가산단 확대 개발 지원(동두천시)	경제투자실	산업입지과	정상	100	경기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두천 국산단단지 확대 개발 지원 추진 * 예산 : 시군비 100억원 국비 100억원 LH 2,100 억원	동두천 국산단 확대 개발 : '25년 승인신청 협의 예정
44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지원(구리시)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완료	0	AI-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상 기회특구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예산 : 민간투자 21,500억원 * 도시개발사업 / SPC 예정	도중합계획 반영 수립 완료 사업계획 수립 지원(道·市·사행자 협의회 개최) : 7 회 중 4회 완료 * 면 적 : 727천㎡(GB해제 660천㎡) * GB해제

공약 번호	공약	담당 부서		추진현황	도예산 (억원)	정책목표	공약달성 확인지표
							결정 : 국토부장관
45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하남시)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정상	0	스마트 4차 산업이 융합된 데이터 클러스터 등 미래형 지역단지 구축 * 예산 : 하남도공 자체비용 2,380억원	도종합계획 반영 수립 완료 GB하계 총량 지원 : 권역간 협의 중 사업계획 수립 지원(道·시·시행사 협의회 개최) : 6회 중 3회 완료
46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지원(수원시)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정상	0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별 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 중심지 구축 * 예산 : 시군비 2,517억원	도종합계획 반영 수립 완료 사업계획 수립 지원(道·시 협의회 개최) : 4회 완료
47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안양시)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정상	0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국가지역안 상생발전) 및 근사시설의 현대화·고급화 * 예산 : 시군비(11.5억원) 민간투자(22,460억원) * 도시개발사업 / SPC 예정	도종합계획 반영 수립 완료 사업계획 수립 지원(道·시·시행사 협의회 개최) : 8회 중 4회 완료 * 면 적 : 3,280,045㎡ (GB하계 1,239,226㎡) * GB하계 결정 : 국토부장관
48	복합산업단지 개발 지원(의왕시)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정상	0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 확보 * 예산 : 시군비(18.52억원) 공공사업(1,612억원) * 도시개발사업 / 공공사업자(협의 중)	* 면 적 : 205,455㎡ (GB하계 205,455㎡) * GB하계 결정 : 경기도지사
<b>분야 2   주택, 교통, 일자리가 유쾌한 경기</b>							
53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이행후 계속추진	비예산	37산도시 및 신규 택지개발 등을 활용한 주택(분양 임대) 20만호 물량 확보 * 경기도 주택환경(2021): 무주택가구 비율(44%), 주택보급률(98.6%) [ 정책개요 ] ▶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20만호 공급 - 중앙정부의 청년·신혼 부부 주거지원 대책을 기반으로 사군 추진사업까지 확대 * 청년·신혼 부부 주거인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 발표(22.10.) - 자본적립형 등 저렴한 분양주택과 분양임대 임대주택 등 맞춤형 분양주택 제공 - CM(Community Management), TM(Town Management) 도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AIP*(Aging in Place)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 생활편의(돌봄, 의료, 식사 등)	단기정책에 연구용역 (주택유형 및 내·외부 개발) 완료 공급계획 수립 완료

공약 번호	공약	담당 부서		추진현황	도예산 (억원)	정책목표	공약달성 확인지표
						통합서비스 도입 * (AIP) 고령자가 익숙한 집이나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23년 하반기 공약 점검회의/23.9.20 - 지역별 계층별 수요를 반영하고 부담 가능한 (Affordable Housing) 공공주택 제공 - 대상자는 공공주택을 비롯한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으로 부지 확보	
54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적 개선	자치행정국	세정과	완료	비예산	(재난비) 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의 공시가격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방별 공제율을 50%까지 상향, 연방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합산하여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기초자치단체 의견수렴 완료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 완료 * '22년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원료로 공약 추진의 정책목표 달성
55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자치행정국	세정과	완료	비예산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취득세 세부담 완화 추진	연구용역 수행 완료 *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법령개정 건의 완료 *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개개정제안 공포 및 시행 지방세 감면 인정요청 완료
57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도시주택실	노후신도시정비과	정상	261.5	1기 신도시 등 노후 지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재정비 추진 및 주거환경개선 * 예산: 사업비 452.13억원	재정비사업 컨설팅: 32회 중 9회 완료 재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완료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지원: 196단지 중 92단지 완료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680단지 중 286단지 완료
58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주택실	노후신도시정비과	완료	비예산	노후 신도시 재정비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건의	특별법(안) 의견 건의 완료
59	노후 신도시 재정비 지원 전담조직 운영	도시주택실	노후신도시정비과	완료	비예산	1기 신도시와 모든 노후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주거환경 개선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TF 설치 완료 재정비 지원 전담조직 신설 완료
60	노후지역 재정비로 인한 이주민 주거안정 대책 추진	도시주택실	노후신도시정비과	이행후 계속추진	비예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이주 수요 분산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입자 주거안	법령개정 건의: 5회 중 2회 완료

공약 번호	공약	담당 부서		추진현황	도예산 (억원)	정책목표	공약달성 확인지표
						정기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시기 단축	
61	3기 신도시,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건설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	정상	비예산	3기 신도시 탄소융합형 직주근접 자족도시 조성	공공주택지구 지정: 5곳 중 4곳 완료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 '24년부터 예정 공사 착공: 7곳 중 5곳 완료 * 고양향릉(23.5), 부천대평(23.5), 남양주왕숙·왕숙2(23.6), 하남교산(23.9)
62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마련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이행후 계속추진	비예산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자에게 신규 조성하는 사업 지구 내 주택 예약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자산규모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청약제도 마련	단기청약제도 추진 완료 전문가 의견 수렴: 2회 중 1회 완료 관련 법령 제·개정 건의: 4회 중 1회 완료
63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정상	비예산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제공	연도별 특별 공급 비율: 2% 중 1.3% 달성 * 동탄 A94 공공분양주택 907세대(근린주택 규모) 중 특별공급 12세대(1.3%) ('23.10월)
73	지하공영주차장 확대	교통국	택시교통과	이행후 계속추진	594.16	지하 공영주차장 2,100면 조성 지원(2022년 ~ 2026년) * 예산: 시군비 879.31억원 국비 90.81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2,100면 중 1,504면 완료
<b>분야 3   문화예술, 여가 일상이 되는 경기</b>							
110	소요산·보산동 관광특구 개발 지원(동두천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완료	8.25	관광특구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역 경제 발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예산: 시군비 8.25억원	관광특구 활성화 기반 조성 지원 완료 * '22년: 관광 정비 및 경관조형 설치 완료[550백 만원 지원(도비 275, 시군비 275)] * '23년: 맛·차·홍보 조형물, 야외음악당 관광 정 비[1,100백만원 지원(도비 550, 시군비 550)]
111	세계적인 자연·문화관광지 조성 지원(연천군)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정상	86	한탄강·임진강 등 연천군 일대 천혜의 자연 관광자 원 발굴·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자연·문화 관광명소 조성 * 예산: 시군비 97억원 국비 56억원	연천 임진강 수상철리 관광센터 건립: 건축설계 중 DMZ북한문화공간 연천 안대리 벽돌공장 조성: 실시 설계 중
112	호수 친화 관광도시 지원(안성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정상	0	새로운 관광 수요에 걸맞은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 자원 개발로 관광 경쟁력 향상 * 예산: 시군비 782.15억원	호수 관광도시 조성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 건 추진 중
113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지원(평택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완료	0	평택호를 경기 남부 체험·휴양형 관광단지로 개발 * 예산: 민간투자 8,009억원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계획(안정) 승인 완료
114	신갈호수 용인시민공원 조성 지원(용인시)	기후환경에너지 지국	정원산업과	정상	1.88	용인시 기흥저수지(신갈호수) 공원화 사업 지원으로 도심 수변공간인 신갈호수를 용인시민공원으로 조성	용인시민공원조성 지원: 4개소 중 3개소 완료



공약 번호	공약	담당 부서		추진현황	도예산 (억원)	정책목표	공약달성 확인지표
115	공원 등 여가시설 확충 지원(부천시)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완료	3.15	* 예산: 시군비 3,05억원 노후된 공원 재정을 통해 쾌적한 여가공간 마련	공원 등 여가시설 확충 지원 3개소 완료
116	과천청사 유휴지 시민공간 조성 지원(과천시)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이행후 계속추진	미정	* 예산: 시군비 4,35억원 중양부처, 경도, 과천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천청사 유휴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활용 지원	중양-도-과천시 등 참여 실무협의회 운영: 8건 중 3건 완료
<b>II. 더 고른 기회 :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b>							
<b>분야 6   복부에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b>							
204	경기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정상	2,452	경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 투자로 경기 북부 지역주민의 균형발전 도모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예산: 시군비 791억원 국비 4억원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연구 완료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누계) 완료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예정 물류단지 조성 대상지 선정 예정 특별자치도 설치 비전 수립 완료
20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이행후 계속추진	29.9	▶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 평화공존 사대를 준비하고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주민투표 추진	공론화위원회 설치 완료 주민투표 건의 완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 건의 (-행안부)
206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정상	3,696	경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확대하여 기회의 지역에 성장동력 창출 * (세입) 도 보통세 징수액 2% 이내 (세출) 지역균형발전사업(전략사업, 군특정사업) 등 * 예산: 시군비 1,340억원 국비 12억원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연구 완료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누계) 완료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25년 예정
207	접경지역 규제완화 추진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이행후 계속추진	비예산	접경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시 각종 부담금 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부담금 감면조항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제한 규정을 두어 특별법외면 규정 적용 배제 *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교로 민간투자 환경 저해 -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외하고 우선 적용토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 가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건의: 3회 중 1회 완료
208	접경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정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이행후	비예산	▶ 군사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규제개선 건의: 7건 중 5건 완료

공약 번호	공약	담당 부서		추진현황	도예산 (억원)	정책목표	공약달성 확인시표
	비(연천군)		관	계속추진			군관 정책협의회 추진 완료
<b>III. 더 나은 기회 : 가치 있는 미래의 삶을 약속하는 도정</b>							
<b>분야 7   소통·협치로 만드는 자치 경기</b>							
225	공공기관 이전 추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 관	정상	미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동북부 지역 분산 배치 ▶ 다문화국제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가꾸기 조성(가꾸기 쓰레기 방지 해결) * 예산 : 시군비 0.1억원	공공기관 이전 : 3개소 중 1개소 완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3년 8월 이전 완료
246	다문화국제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안산시)	기후환경에너지 지국	자원순환과	정상	0.05	< 안산 다문화특구 > • 위치/면적 : 안산시 단원구 원목동 795번지 일원 /373,813㎡ • 외국인 현황 : 103개국 82,640명(2022. 3월 말 기준) - 중국 54,400 / 우즈베키스탄 7,976 / 러시아 6,859 등	가정배출시설 설치 운영 완료 간담회 등 주민소통 실시 : 6회 중 2회 완료 사업 산형 공모 : 5회 중 2회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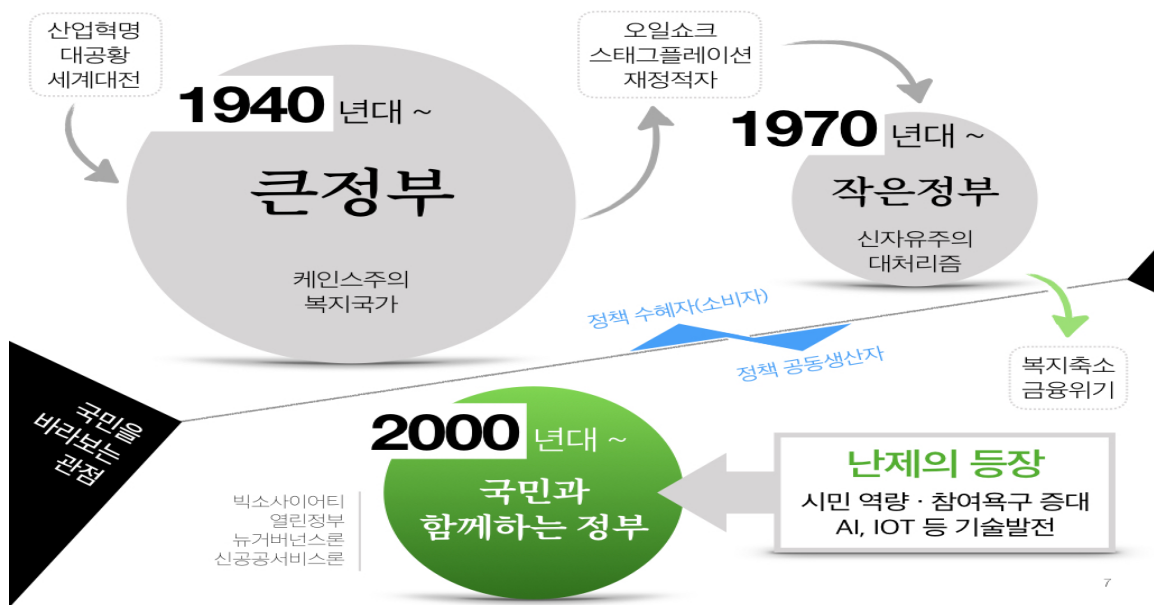
# <토론문> 민선 8기 2년 협치/언론분야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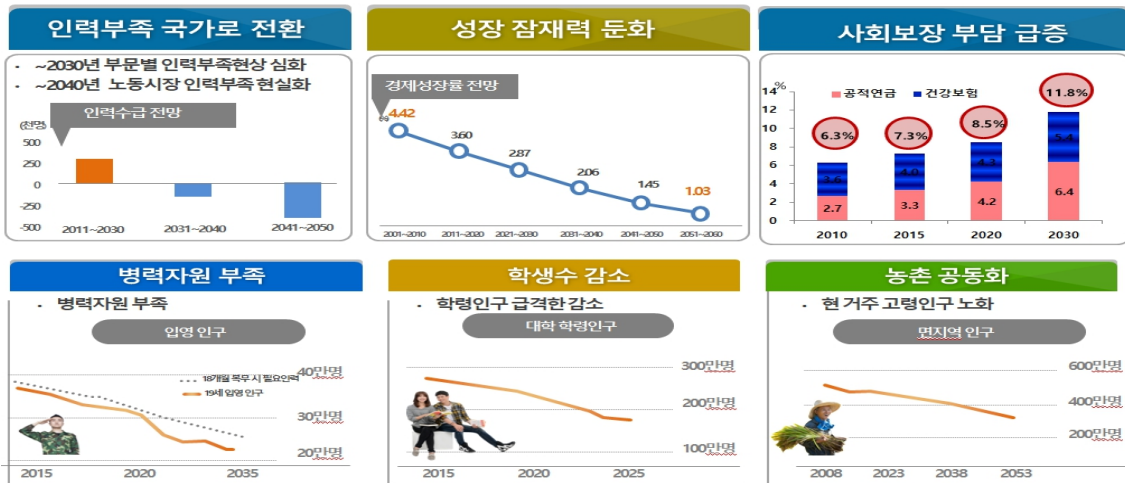
## <협치분야>

### 1. 협치가 필요한 환경

#### 시민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 변화



#### 인구구조변화의 영향



## 2. 정부실패-시장실패-사회혁신

### ○ 사회혁신

- 사회혁신은 1990년대 유럽에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다루는 대응 전략으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유럽 너머까지 영향 미침.
- 미국은 2009년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부서 백악관에 설치
- 영국은 큰 사회(Big society)은행을 만들어 사회혁신 지원
- 유럽연합은 2010년 사회혁신을 유럽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유럽2020」보고서 발간
- 유명 대학들이 경쟁하듯 ‘사회혁신센터’를 만들거나, ‘사회혁신’과목을 개설
- 사회혁신전략을 주장해온 영국의 NESTA나 영 재단(Young Foundations) 등 일부 외국의 두뇌집단들은 전례 없는 관심을 받음.
- 정부, 시민사회, 기업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국제 사회혁신 네트워크 출현
- 사회혁신 200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부상한 정책산업
- 협치(협력적 거버넌스)는 사회혁신의 행정적 수용 방식.

### ○ 사회혁신 한국적 수용

- 사회혁신이 정책전문가집단 내에서 등장했을 때가 2010년 전후 (예) 2008년부터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은 기술혁신의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접합하는 데 국가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함.
- 유럽 사회혁신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노력했던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취임.
- 박원순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 사회혁신 전담부서를 서울정부에 설치
- 이후 서울지방정부는 사회혁신을 박원순시정의 핵심 브랜드로 육성
- 시민사회 일부는 자신이 수용한 사회혁신을 ‘시민민주주의’접근으로 정의( 두 흐름은 한국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양분하는 핵심 패러다임)
- 패러다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융합, 사회혁신을 국정 과제로 선정.
- 행정안전부는 2017년 9월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사회혁신 추진단>을 발족
- 경남, 전남등 여러 지방 정부가 정부가 지원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혁신사업’을 추진, 사회혁신에 관한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전문가집단, 학계의 관심도 빠르게 성장. 이 현상의 배후에는 현대 사회가 그 이전에 만난 적이 없던 난제와 직면해 있다는 공통분모가 존재.

### 3. 한국정부 실패

- 정부(통계청)의 2011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45만명으로 예측됐으나 실제로는 26만1000명, 합계출산율 예측은 1.36명이었으나 실제로는 0.81명
- 2016년 정부가 전망한 2022년 출생아 수는 41만1000명이나 실제로는 24만9000명, 합계출산율은 1.26명이었으나 실제로는 0.78명. 정부 추계와 예측이 기본적인 인구통계에서도 실패하고 있음
- 정밀한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해 추계한 수년 앞의 전망조차 무색할만큼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과 ‘단기 미래’에 대한 개인, 사회의 인식과 정부의 진단은 완전히 다름. 인식과 접근의 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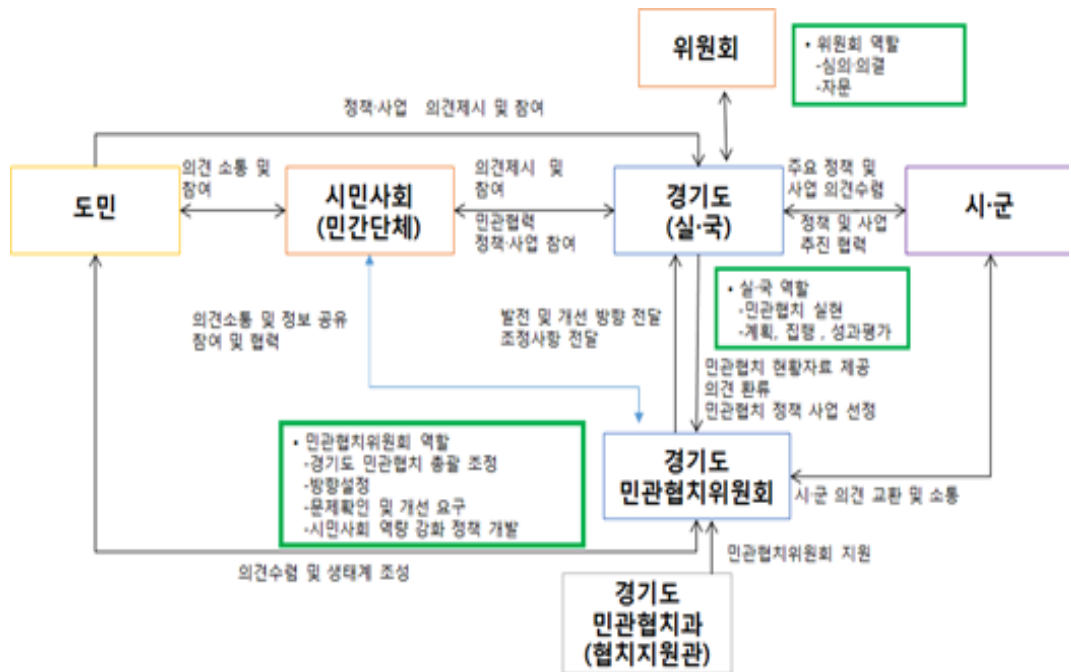


#### 4. 경기도의 민관협치

- 민선 6기 연정 공간에서 협치친화적 정책영역인 복지, 여성, 환경거버넌스 운영
- 민선 7기 시민사회단체 제안

### 민선7기 민관협치 비전체계

<b>비전</b>	<b>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b>		
<b>목표</b>	<b>도정전반의 민관협치모델 확산</b>	<b>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b>	<b>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 제도적기반조성</b>
<b>추진 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형 정책공론장 확립</li> <li>·민관협치 전략의제 선정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협치역량강화</li> <li>·도민협치역량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협치 제도개선 의제선정 및 추진</li> <li>·협치활동 환류 강화</li> </ul>
<b>핵심 과제</b>	<p><b>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li> <li>·도민참여 공론화사업 추진</li> <li>·경기도형 사회협약 추진</li> </ul> <p><b>민관협치활성화 포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협치활성화포럼 운영</li> </ul> <p><b>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협치분과설치·운영</li> <li>·도·시·군민관협치플랫폼조성</li> <li>·협치지문단 운영</li> <li>·민관협치위원회지원체계구축</li> </ul>	<p><b>협치교육프로그램개발과확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협치학교 운영</li> <li>·협치교육 교재개발</li> </ul> <p><b>공익활동증진및민사회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li> <li>·시·군시민사회활성화 지원</li> <li>·공익단체 활동지원</li> </ul> <p><b>공익활동 역량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활동가능성지원과 협치교육</li> </ul>	<p><b>도민 참여 수준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온라인플랫폼구축,운영</li> <li>·주민참여예산제 혁신</li> </ul> <p><b>민관협치진단및프로세스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국별 협치의제 사업발굴</li> <li>·도정주요계획, 주요정책 및 사업 진단추진</li> <li>·협치매뉴얼 작성과 관리</li> </ul> <p><b>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치역량 평가모델과 참여형 평가프로세스구축</li> </ul>



## 5. 타 지자체 민선8기 변화\_정치적 환경 변화

- 예산삭감 : 서울시, 고양시 대폭 삭감
- 조직축소 : 많은 지역에서 전담부서가 비전담부서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해당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던 과가 사라지고 팀단위로 축소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의미함
- 중간지원조직의 위상 변화: 민선8기가 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법인변경, 민간위탁 법인의 직영 법인화, 중간지원조직폐지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아니더라도 예산과 인원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 6. 경기도 민선8기 협치 평가

- 조직, 인력, 예산을 중심으로 민선7기와의 단순 비교 부적절. 서울 민선 7기와의 비교?
- 도의회 구성, 31개 시·군과의 협력 정도 등

### ○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 유형

정책영역	정책유형	주요정책사례
협치의 시민참여 정책	기반조성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개정</li> <li>•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원, 확대</li> <li>• 공간기반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li> </ul>
	시민사회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li> <li>• 공익활동가 지원</li> <li>• 시민사회단체 직접 협력 사업</li> </ul>
	민주시민교육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 정책</li> </ul>
	자원봉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관련 정책</li> </ul>
	참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주민 참여 및 소통 온·오프라인 공론장</li> <li>• 시민 제안, 발안 정책</li> <li>• 시민·주민 참여 예산제</li> </ul>
광의의 시민참여 정책	마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 기반조성</li> <li>• 마을공동체 공모 지원사업</li> </ul>
	자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권한 강화를 위한 직접민주주의 관련 정책</li> <li>• 주민자치회 활성화</li> </ul>
	협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와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복지,여성,기후환경,마을/주민자치,사회적경제,도시재생, 문화 등)</li> </ul>



## 분야 7 | 소통·협치로 만드는 자치 경기

219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511
220	경기도 도정혁신위원회 설치	기획조정실	기획전략담당관	513
221	도민발안제 활성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515
222	행정정보 제공의 편의성 증진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517
223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전담부서 신설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520
224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운영	기획조정실	기획전략담당관	522
225	공공기관 이전 추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525
226	협치를 통한 공동공약 추진	기획조정실	기획전략담당관	527
227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한 협치 강화	소통협치관	소통협치관	529
228	경기도민 정책축제	소통협치관	소통협치관	531
229	지방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혁신 실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533
230	농어촌 이·통장 수당 인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535
231	1만명 이상의 청원 도지사 답변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537
232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사회적경제국	공동체지원과	539
233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541
234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543
235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545
236	다문화가족 청소년 상담 지원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547
237	도청과 공공기관에 SNS 소통관 배치	홍보기획관	도민소통담당관	549
238	경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미래성장산업국	시빅데이터산업과	551
239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고시스템 전면 확대	교통국	교통정보과	554
240	경기도형 광역 재난대응체계 구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57
241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60
242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강화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563
243	소방관·사회적 의인 추모공원 조성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565
244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 건립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567
245	레저활동 안전 지원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570
246	다문화국제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안산시)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자원순환과 등	573

출처: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3.12.31. 기준)

### 7. 민선8기 경기도정의 협치는?

- 근거기반 정책, 정책연구자, 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광역행정의 문제\_보충성의 원칙 등
- 행정부담
- 협치평가제도의 적실성
- 의사결정권자의 의지



# 「2024-2027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요약

## 수립근거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13조

## 비전

**더 깊은 숙의와 더 넓은 참여로 기회경기 실현**

## 목표

- ① 도정 전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더 깊은 숙의**' 모델 확립
- ② 도민의 '**더 넓은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정책 아젠다 조성
- ③ 민관의 '**더 많은 공감**' 사례 확산으로 인식 개선

## 추진과제

### · 6대 전략 ▷ 13개 추진과제

#### 1. 숙의기반 정책제안 활성화

- 숙의기반 민관협치위원회 도입·운영
- 경기도 공론화 모델 활성화

#### 2. 민관협치 네트워크 강화

- 도·시군 민관협치 파트너십 모색
- 도·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3.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

- 경기도민 정책축제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고도화

#### 4. 참여를 통한 아젠다 조성

- 경기협치미니포럼 활성화
- 분야별 공익활동 육성과 활동 촉진
- 경기도 행복 정책 활성화

#### 5. 민관협치 공감대 확산

- 경기도 협치학교 활성화
- 경기도 민관협치 백서 제작·확산

#### 6. 사례 중심 평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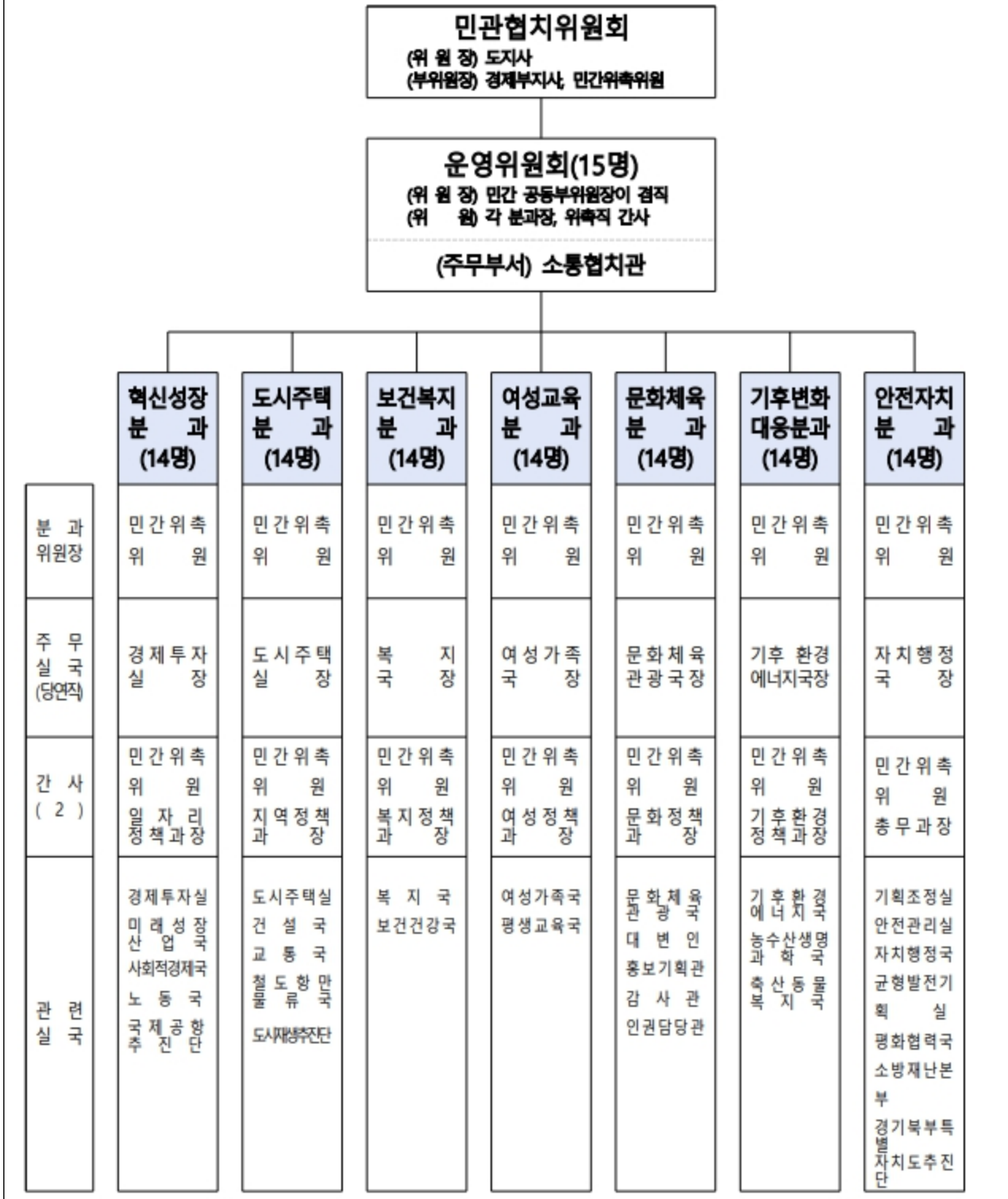
- 협치역량평가제도 활성화
- 협치 우수사례 프로그램 도입

## 재정계획

### · 4년간('24~'27) 총 예산 424억원

- 연도별 : ('24) 103억원 ('25) 106억원 ('26) 107억원 ('27) 108억원
- 자원별 : 도비 100%

□ 구성 및 체계



□ **시·군 민관협치 체계** ('23년 12월 기준)

-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시행(9개 시·군)  
※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평택시, 안양시, 파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 민관협치위원회 설치·운영(8개 시·군) ※ 하남시 미운영
- 민관협치위원회 전담부서 운영(5개 시·군) ※ 수원, 용인, 평택, 안양, 광명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운영(6개 시·군) ※ 성남,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구리

◇ **주요성과 [2020~2023]**

□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 구축**

- 다양한 사회문제와 갈등 관련 의제의 사회적 합의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사업 추진  
※ '23년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 '22년 도심 내 공향, 어떻게 할 것인가?
-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를 통해 도민이 직접 다양한 정책제안과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화합의 장 마련  
※ 총 15건 정책화 완료 / '22-'23년 정책화 반영중 '21년(6건), '20년(9건)
-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 '23년 민관협치위원회 규모·기능 확대 (30명→100명, 3개분과 → 7개분과)
- 실효적 민관협치 달성을 위한 협치자문단 운영  
※ 6개분야 51명 운영 / '23년(51명), '22년(28명)

□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 및 역량강화 추진**

- 공무원,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을 시행하여 수평적 협력관계 기반 조성  
※ 총 1,485명 / 온라인 교육영상 3차 제작 / 워크숍·포럼 9회
- 도민과 공무원의 원활한 접근과 지속적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온라인 e-협치교육 영상 제작·확산  
※ (도 민) 알기 쉬운 민관협치 (조회수 1,484회)  
※ (공무원) 민관협치의 이해와 사례 (조회수 5,556회)  
※ (공무원) 숙의과정의 이해 (조회수 389회)  
※ (공무원) 경기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집중탐구('23년 신규)

○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운영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촉진

- ※ '23년(공익활동단체 지원 23개, 공익활동상담 지원 146건, 공익활동가학교 689명 등)
- ※ '22년(공익활동가 성장지원 9개, 교육비지원 74명, 비영리스타트업지원 14개 등)
- ※ '21년(비영리 스타트업 17개, 활동가 성장지원 25개, 시군 공익활동장려사업 140개 등)
- ※ '20년(공익활동사업 18개분야 지원, 공간활용 1,400명)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신설을 통해 민·관이 함께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 속의 과정 도입·운영

- ※ 총 75건, 173억 / '23년(16건), '22년(16건), '21년(24건), '20년(19건)

○ 민관협치분야 주요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진단, 개선 권고를 통해 협치도정 체계 마련

- ※ '22년(경기도 민관협치체계 고도화 권고) '21년(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 개선 권고), '20년(道 중장기계획 협치진단 및 개선 권고)

○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 도입

- ※ 도 부서 역량점수 평균(만점 2점) : '22년(0.96점), '21년(0.6점) / 총 194개 부서
- ※ 협치 우수사례 달성(32개) : '22년(S등급 17개), '21년(S등급 15개)

◇ **운영상 한계점 및 대안**

□ **도정 전반의 폭넓은 참여구조 한계 발생**

- 1-2기 민관협치 참여 구조는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을 확장하고,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에 있어 한계 발생

⇒ **도정 주요분야별 인적자원 확충으로 정책별 이슈화를 선도하고, 속의기반 양질의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운영체계 모색**

□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부재**

- 민관협치 저변을 확대하고, 파급력 확산을 위한 다양한 단위(유관 거버넌스, 공익활동단체, 31개 시·군)와의 협력 네트워크 부재

⇒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분야(기후위기, 사회적경제, 복지, 보육·돌봄, 도시주택 등)에서 협력체계 다각화 모색**

□ **단발적 역량강화 및 평가로 단계적 성숙 한계**

- 협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단발성과 협치역량평가의 사후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인해 민관협치 인식의 단계적 성숙 어려움

⇒ **수준별 협치역량강화 커리큘럼 구성, 민관협치 우수사례 확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과 평가 결과의 연계성 및 지속성 강화**



##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산식	점수	비고
시민참여 활성화 분야	① 시민 제안 수용 노력	▶ (시민) 정책 제안 부서 채택 건수	건당 5점	
		▶ (시민) 정책 제안 부서 실행 건수	건당 10점	
	② 시민참여 환경 조성 적극성	▶ 【새빛톡톡】 시민제안 부서 등록 건수	건당 5점	
		▶ 【새빛톡톡】 설문투표 신청접수 부서 등록 건수	건당 3점	최대 10건
	▶ 협치 행사(포럼 등) 부서 참여	건당 10점		
협치시정 촉진분야	③ 협치교육 이수 실적	▶ 협치교육 이수율 현원 90%이상	10점	
		▶ 협치교육 이수율 현원 30%이상~90%미만	7점	
		▶ 협치교육 이수율 현원 30%미만	3점	
	④ 협치위원회와 소통 노력	▶ 협치위원회 참여 · 협조(의견 반영)	5점	
	⑤ 공론절차 이행 노력	▶ 부서 주관 공론 절차 이행 건수 (수요조사, 설명회, 공개간담회, 토론회 등)	건당 5점	
	⑥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사업 실행 노력	▶ '누구나 시민제안가' 서비스디자인 참여부서	20점	
	⑦ 협치 성과 확산	▶ 협치 우수사례 제출 건수	건당 10점	
▶ 협치 우수사례 채택 건수		건당 15점		

출처: 2024년 수원시 협치역량평가계획

### ○ 평가결과

- 우수부서(15개): 성과관리(BSC) 차등 가점부여(0.5점 이내)
- 우수공무원(5명): 인사 실적가점 0.1 ~ 0.3점 부여

### <언론분야>

- 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은 시대 과제이자 국가 의제임. 자치에 기초한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제를 공론화하고, 지역 공동체에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지역 미디어의 존재가 필수적. 지역방송은 해당 지역에서 지역성을 구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지역신문은 삶의 가장 가까운 현장인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미디어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하지만 지역방송은 지역 여론과 문화의 구심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역방송의 한계는 정치와 경제가 서울에 집중된 한국 사회구조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지역방송의 역할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재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신문 역시 지역의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음. 지역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국가의 지역신문 지원 책무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역신문지원제 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포털 중심의 디지털 뉴스 유통 지배와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한국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구조적인 중앙 집중으로 지역신문의 의제 설정 기능도 급속히 축소됨.
- 미디어환경은 지역방송의 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에 전국사업자인 IPTV가 유료방송시장을 독과점하고, 인터넷 기반 OTT 서비스가 확대하면서 지역방송의 생존조건은 급격히 악화됨. 특히 새로운 미디어는 권역별 독점체제에 안주해 온 지역방송의 생존전략을 재점검하도록 강제함. 본질적으로 전국 권역을 커버하는 뉴미디어의 속성상 독점적 방송권역과 이에 수반되는 전파료 및 광고수익 배분에 의존해온 지역방송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음.
- 디지털미디어환경은 지역신문이 갖고 있는 공간적 지역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뉴스생태계는 지역신문의 위기를 가중 시키고 있음.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중앙/전국 뉴스 중심의 속보 경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역 공론장 형성과 중앙 정책/정치에 대한 지역의 관점을 축소시킴. 포털의 뉴스 정책 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 언론사가 지역신문사임에도 지역신문의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 독자 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최근 경향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율이 줄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로 뉴스를 보는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음.
-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땀질식 처방을 반복해옴. 방통위의 중장기제도개선추진 반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지역성과 지역방송 관련 정책 제안 역시 동일한 한계를 보였음. 지역방송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및 네트워크 개선을 포함한 지역방송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적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와 지원의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함.
- 지역신문 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포털 중심의 뉴스생태계 내 지역신문의 위상을 증진할 계획이 부재함.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은 지역언론사의 지역독자를 향한 경쟁보다 중앙부서를 향한 경쟁으로 전도되어 나타남.
- 경기도는 사실상 지역언론/미디어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태임.

## <토론문> 경기도정 전반에 관하여

황상규 인천경기기자협회 회장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2년이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기회 수도'를 내세우며 청년과 약자를 포용하고 해외로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기후와 돌봄 정책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축소판으로서의 역할을 대체로 잘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동연 지사의 도정운영 긍정평가가 58.8%로 17개 단체 중 처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년의 경기도정을 돌아보면 이처럼 성과도 있었고 그에 반해 아쉬움도 공존한다.

성과로는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한 부분이 눈에 띈다. 37개국 160여명. 민선 8기 경기도와 만난 국가와 주요 인사 규모다. 지난 2년간 첨단산업, 기후, 경제위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국가와 교류의 폭을 넓혔다. 해외 투자유치와 국제기구 연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비롯해 우호 협력 강화라는 내적 가치도 차곡차곡 쌓았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 첫 순방으로 미국을 택했고 지난달에도 미국을 찾아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는 등 미국과의 관계에 많은 공을 들였으며 중국과의 교류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과도 교류하며 광폭행보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임기 내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 지난 2년간 투자유치 규모만 69조2천억원에 달해 목표의 70%를 달성한 셈이다. 무엇보다 용인과 평택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26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실제로 추진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앞서 많은 지사들이 후보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이를 진정성있게 추진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민선 8기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출범 직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발족했고 지난해 9월 선포식을 열어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했다. 최근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 관한 잡음도 있었지만,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작업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역 순회 간담회만 100회 이상 열렸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법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2년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회의 경기'를 기치로 내걸고 기회소득을 도입한 부분도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적 성과다. 시장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공공이 지원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고 전체 사회의 공적 이익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반면, 경기도 민선 8기를 떠올렸을 때 뭔가 뚜렷한 칼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도민들의 요구와 이해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나열식 사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뭔가 김동연표 핵심 정책으로 내세울만한 '한방'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대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포장된 정책이 아닌 진짜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 말이다.